

전북 체감형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조건 : 사람중심, 국가균형, 자치분권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10.24 vol.182

www.jthink.kr

연구진
이지훈, 부연구위원
임승현, 연구위원
오병록, 부연구위원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10.24 vol.182

CONTENTS

전북 체감형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조건 : 사람중심, 국가균형, 자치분권

1.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 흐름의 한계	
1)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중심	4
2) 도시와 농촌, 지역간 삶의 질 격차 가속화가 우려되는 '시티'중심	5
3) 획기적 자치분권 기대 속 '중앙'중심	7
2.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1) 지역체감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TS(Trouble Shooter) 제도 도입	9
2) 전북혁신도시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리빙랩 핵심거점'으로 조성	10
3)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수출가능형 스마트 빌리지 시범사업' 전북에 조성	11
4)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 '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 전북 설립·지정	12
5) 광역지자체 중심 계획·선정과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조성	13
6) 계획-조성-운영이 결합된 '생활형 SOC 스마트시티 패키지 사업' 추진	14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취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북 체감형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조건

: 사람중심, 국가균형, 자치분권

-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이었으나, 최근 정책 흐름은 4차 산업혁명 또는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신기술·신서비스 테스트에 중점을 두어 중앙 주도적으로 대도시·신도시 중심으로 선정됨
- 실제 국가 예산이 반영된 스마트시티 선정지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며, 이는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외가 심화 될 우려가 있고 국가적 정책에 광역도의 참여가 제한적, 소극적인 문제도 발생
- 당초 국가가 추진하고자 한 스마트시티 조성목적에 되살리기 위해서는 1) 기술이 아닌 지역주민 중심, 2)시티에서 국가균형발전 중심, 3)중앙주도에서 자치분권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절실함
- 첫째, 기술이 아닌 지역주민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역문제를 잘 이해하는 지역주민이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획, 개발, 평가 할 수 있는 ‘문제해결사(Trouble Shooter)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중심의 마스터 플랜너(MP)를 견제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
- 또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혁신도시 스마트시티는 이전 공공기관 및 주민이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족·불편 정주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혁신도시 내 연구기반이 잘 갖춰진 전북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리빙랩 핵심거점’으로 지정하고, 개발된 서비스를 전국혁신도시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
- 둘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고려하여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에 어울리는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를 전라북도에 시범 조성하고, 관련 정책과 기술을 체계적 연구·지원하기 위해 독일 프라운호퍼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의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와 같은 ‘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설립도 검토 필요
- 셋째, 중앙주도에서 자치분권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내 가칭 ‘지역 스마트시티 추진단’을 두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지역의 전략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 단위 스마트시티 사업을 선정토록하며 또한 지자체와 중앙이 협력 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 지자체 몫을 별도 구성하는 것도 필요
- 아울러 지역의 삶의 질 개선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해 ‘생활형 SOC 스마트시티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과 조성분 아니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 단계에서도 국비 투입의 당위성 확보 마련이 필요

1.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 흐름의 한계

1)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 중심

▣ 정책 흐름

- 문재인 정부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혁신도시 중심 스마트시티¹⁾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계획도 발표됨
 -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구성(2017.11)
 -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2018.1) : 도시혁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국가 시범도시 신규조성과 혁신도시 선도모델(나주 스마트에너지, 김천 스마트교통) 조성 계획 등을 발표
 -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기본구상 발표 : 조성 목적으로 신기술 실증, 비즈니스 모델이 핵심으로 제시(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8.7.16)
- 국토부,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시티 R&D 실증도시로 대구와 시흥을 선정(2018)

▣ 지역관점에서 비판적 문제 제기

-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 목적은 당초 국가균형발전이었으나, 최근의 정책 흐름은 신기술·신서비스 테스트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또는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변질됨
 - 대규모 국가주도 스마트시티 선정지역이 대도시(부산, 대구)이거나, 수도권(경기도 시흥)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는 거리가 있음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에 따르면, “스마트도시는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 바탕으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 도시”를 의미함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과학자·스타트업 기업인이 마스터플래너(MP)로 선임되거나, 스마트시티 선정의 목적이 신기술 실증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어 과거 기술 중심 U-city 조성 정책과 유사한 흐름을 보임
- 이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의 목적이 도시문제 해결에 있다는 점과도 차이가 있음
-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선도모델 조성 내용도 혁신도시 이전기관 보유기술 활용 신기술·신서비스 테스트 중심이며, 이마저도 관련 예산 확보는 불투명
 - 나주 한국전력 중심 원격부하제어 등 신재생에너지, 김천은 튜닝기술, 자동차 검사·인증 등
 - 혁신도시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스마트시티 모델을 계획 중에 있으나, 계획 수립 후 국토교통부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단계
 - 통상 스마트시티 사업비는 주택 분양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도시는 이미 1단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별도 국비 지원 없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민간 자원 확보가 어려움

2) 도시와 농촌, 지역간 격차 가속화가 우려되는 ‘시티’ 중심

▣ 정책 흐름

- 국가 예산이 반영된 스마트시티 관련 대상지는 수도권이거나, 광역시 단위 중심으로 선정
 -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인천, 부산, 대구, 울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스마트시티 R&D 실증도시(대구, 경기 시흥) 등 수도권 기초지자체이거나 광역지자체 중심
 - 광역도 단위로는 충북, 경남이 스마트시티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특화단지 MP에 선정(지자체별 2.5억 내외 수준, 50% 지자체 매칭)되었고, 2018년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에 충북 제천, 경남 김해, 경북 포항이 선정
 - 수도권, 인구 50만 대도시, 광역시 제외 지역으로는 충북 제천이 유일

〈그림 1〉 국비 지원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대상지



출처 : 전북연구원 지능형 전북시티 조성 발표자료(이지훈, 2018)

지역관점에서 비판적 문제 제기

- 스마트시티 조성의 철학적 목적은 도시의 문제해결을 통해 시민행복에 있으며, 국정과제의 정책적 목적은 지역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균형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사업 추진은 오히려 국가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외로 이어져 삶의 질 격차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와 농어촌 모두 행복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농어촌이 도시보다 더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임
 - 즉 국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시민행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뿐 아니라 농어촌에 대한 관심, 특히 농어업 ICT 융합뿐 아니라 농어촌 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도 필요²⁾

〈그림 2〉 도시 및 농어촌 주민 행복도 비교

(평균 점수/ 10점 척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시 지역(동 지역)	6.5 (n=1,269)	6.4 (n=950)	6.2 (n=1,039)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6.7 (n=1,775)	6.4 (n=1,950)	6.2 (n=1,991)
전체	6.6 (n=3,044)	6.4 (n=2,900)	6.2 (n=3,030)

출처 :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따라서 ‘시티’라는 용어에서 발생하는 수도권·광역시·신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 추진사업의 패러다임을 농촌, 구도심, 광역도 단위로 전환 필요

2) ICT기반 창조마을 조성사업과 같이 농촌 생활문제에 ICT 융합 사업이 존재하나 마을별 5억 내외로 지원규모가 작고, 농촌 마을단위 사업으로 군 단위 또는 도농복합 도시의 통합적으로 운영·관리에는 어려움 존재

- 시티라는 용어로 인해 시티를 총괄하는 광역시는 관련부서를 신설하나,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도는 스마트시티 담당부서가 부재할 뿐 아니라 역할도 모호한 실정
- 특히 신기술, 신서비스 중심의 스마트시티의 경우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기술, 지역 외 타지기업의 보유기술에 절대적 의존하는 구조로 지자체가 자발적 스마트시티 기획, 추진에 난관 존재

〈그림 3〉 광역지자체별 스마트시티 담당부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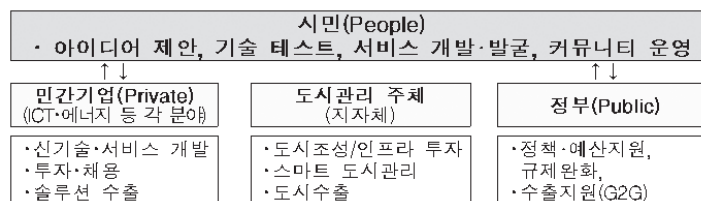
출처 : 전북연구원 지능형 전북시티 조성 발표자료(이지훈, 2018)

3) 획기적 자치분권 기대 속 '중앙' 중심

▣ 정책 흐름

- 과거 U-city 조성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스마트시티 조성정책에 있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추진전략(2018.1)에 따르면 3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주체별 역할 강조
 - 민간의 창의성 활용,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시민참여와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리빙랩 구현 포함

〈그림 4〉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개방형 혁신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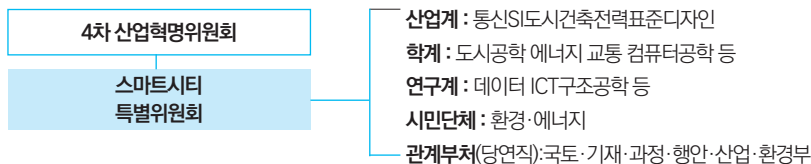
출처 :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추진전략(2018.1)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리빙랩, 해커톤,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혁신 방법론이 등장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선정에 있어 실증사업에 시민참여 방법, 시민에게 데이터 제공 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대부분의 실증사업을 리빙랩³⁾으로 운영하도록 설계함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통하여 주민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기반의 스마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참여로 도출된 도시문제를 체감형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기술 중심 과학자·스타트업 기업가 출신을 마스터플래너(MP)로 선임

▣ 지역관점에서 비판적 문제 제기

- 스마트시티는 지자체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 공간에서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 정책논의와 사업추진에 있어 지자체 참여는 제한적
 -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 지자체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위원 부재
 - 지자체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또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제안자로만 참여 가능
-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과 사업내용에 집중되어 있고, 조성 후 운영관리 대해서는 사전 논의 없이 전적으로 지자체 몫으로 전가
- 단기간 공모사업 공고·선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자체는 주민참여, 데이터 확보, 운영관리 자원 확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우선 사업 선정을 위한 경쟁에 내몰림
 - 현재 다수의 지자체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거나, 구축된 데이터가 있더라도 상호 통합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못함
 -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을 기획함에 따라 특정 지자체에 문제해결이 아니거나 이미 알려진 일반적 서비스가 제안됨(예 :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쓰레기통 등)

〈그림 5〉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구성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11.16.)

3) 리빙랩이란 특정 지역, 공간에서 시민참여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사용자 주도형 실증방식(출처 :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실증도시 선정 공모안내서, 국토교통부 외)

2. 전북 체감형 국가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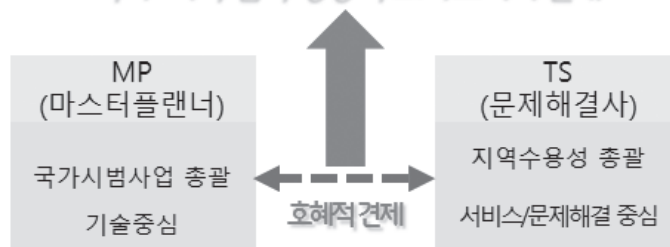
▣ 지역주민 중심적 스마트시티

1) 지역체감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TS(Trouble Shooter) 제도 도입

- 스마트시티 조성의 궁극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도시문제를 잘 파악하고, 지역 시민의 입장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획, 개발, 평가 할 수 있는 문제해결사(Trouble Shooter) 제도 도입 필요
 - 도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시민의 참여 없이 과학자, 스타트업 기업가 중심의 스마트시티 계획, 조성만으로는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조성이 불가능
 - 따라서 지역시민과 지역이 국가주도 공모사업의 대상 주체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 스마트시티 문제해결사(Trouble Shooter)는 지역시민 입장에서 지역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시민으로 지정하고 지나치게 기술 중심으로 흐를 수 있는 MP를 견제

〈그림 6〉 지역수용성 중심 문제해결사 제시

국가-지역 협력 성공적 스마트시티 설계



2) 전북혁신도시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리빙랩 핵심거점’으로 조성

- 기반조성이 마무리된 혁신도시가 지역에 정착되어 지역발전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불편한 정주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활용 가능
 - 전국 혁신도시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에서 개발, 실증하고 전국 확산 하는 모델이 보다 적합

- 혁신도시별 도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스마트 주차정보 알림서비스’, ‘주민참여형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 ‘공공주차장에 대한 위치 및 주차가용대수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표출해 주는 서비스’등을 전북혁신도시에서 최초 개발, 적용하여 전국 확산

● 따라서 관련 여건이 잘 갖춰진 전북혁신도시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리빙랩 핵심거점’으로 지정 할 것을 제안함

- 전북 혁신도시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간정보연구원, 전기안전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다수의 이전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소재
- 혁신도시 정주여건(교통, 안전, 교육 등) 문제를 ICT로 융복합하기 위해 혁신도시 주민을 혁신도시생활연구자로 지정하여 해결문제를 발굴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도내 대학과 기업이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
- 연구개발 실증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를 규제 샌드박스로도 지정

〈그림 7〉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리빙랩 핵심거점(안)



▣ 균형발전적 스마트시티

3)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수출가능형 스마트 빌리지 시범사업’ 전복에 조성

- ‘시티’단위 스마트시티 조성에 국한하지 말고, 국가전체가 고르게 잘 사는 국가 관점에서 농촌이나 도농복합도시에 적합한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를 개발, 확산 추진 필요
 - 동남아, 아프리카, 북한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농촌 중심 생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스마트 빌리지 시범사업은 단순 국내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뿐 아니라 수출 가능한 비즈니스도 확장 가능
- 실제 유럽, 인도 등에서는 도시와 농촌 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 빌리지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EU는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 Action for Smart Village’ 발표하였으며, 인도 역시 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와 더불어 농촌 지역을 위한 스마트 빌리지 조성을 추진

〈그림 8〉 인도의 스마트 빌리지 계획

유형	인도의 스마트시티 계획	인도의 스마트 빌리지 계획
개념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도시 인프라 고도화를 실현하는 도시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마을
목적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이에 따른 경제성장 유도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 문제와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 건설
대상	인도 전역에 걸쳐 2022년까지 100개의 스마트 시티 구축	2019년까지 의회 의원 지역에 1개 이상의 스마트 빌리지 구축

출처 : 시민 주도 스마트시티의 도전과제(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며, 한국 농촌, 도농복합도시를 통해 수출 가능한 스마트 빌리지 시범사업을 관련 기반이 갖춰진 전라북도에 1호 시범사업을 추진 할 것을 제안

- (기술) 전북은 국내유일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예정), 농생명 특화 혁신도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촌, 농업, 농민 적용에 있어 타 지자체 보다 우위 확보
 - (참여) 전라북도 내 삼락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민, 농촌, 농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발굴 시스템도 갖춤
 - (판로) 또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관계자의 전북 방문으로 홍보·수출 여건도 확보
- 실제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사업에 전북은 완주, 고창 등 군 단위가 선정되었으며, 고창은 우리나라 최초로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농어촌 특화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 확장해 나가고 있음

4)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 '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 전북 설립·지정

- 대도시, 신도시와 달리 농촌, 도농복합, 지역 구도심 등에 특화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이 같은 도시 특성에 맞는 문제 해결방안과 기술적 대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거점조직 설치·운영 필요
 - 신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시티연구센터' 등을 포함해 그간 다양한 정책연구, 기술연구 등이 이루어짐
- 독일 프라운호퍼의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IESE)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디지털 빌리지(Digital Village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⁴⁾
 -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를 위해 독일정부는 약 450만 유로(약 60억)를 투입하여 농촌문제에 특화된 디지털 해별방안을 개발함
- 농생명 SW, 스마트 팜 등 연구 환경이 비교적 잘 갖춰진 전라북도에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를 설립·지원하여 단기적으로는 국내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의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수립, 확산의 거점 역할 담당
 - 중장기적으로는 동남아, 그리고 남북 경험 시대에 북한 도시와 농촌의 디지털화 선도 기관으로 육성

4) 유럽형 지역경제 활성화 ICT 프로젝트 스마트빌리지(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 자치분권형 스마트시티

5) 광역지자체 중심 계획·선정과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조성

-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고유 특성을 살려 지자체 주도적 스마트시티 개발, 확산 시스템 필요
 - 광역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구현되는 스마트시티에 광역지자체의 명확한 역할 없이는 책임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제한적,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광역지자체 스마트시티는 광역 시도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전략성과 고유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 단위 스마트시티 사업을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사업비 내용과 규모 등의 적절성 등을 컨설팅하고 자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절실
- 광역지자체 산하 개발공사, 지자체 출연 연구원(시도연구원), 지역 테크노파크 등을 '지역 스마트시티 추진단'으로 지정하고 국비 지원
 - 지역 스마트시티 추진단을 통해 광역 시도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초 지자체가 기획한 계획에 대해 추진단 내 위원회(신설)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
- 또한 광역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 지자체 광역시도 몫 제공
 - 기존 산학연, 시민단체, 관계부처외에 광역시, 광역도, 기초지자체별 특별위원을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

6) 계획-조성-운영이 결합된 '생활형 SOC 스마트시티 패키지 사업' 추진

-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서관과 체육시설, 보건소와 어린이집 등과 같은 '생활형 SOC'을 스마트시티 적용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주민참여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생활형 SOC 스마트시티 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생활형 SOC 시설은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도시계획 시설이 대부분으로 문제인 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그림 9〉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내년 10개대 지역밀착형 생활SOC투자 확대 방안

문화생활체육시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60개, 다목적체육관 20개 설치, 복합커뮤니티센터 5개신설
지역관광 인프라	국립박물관 등 VR AR체험관 19개 설치 및 보강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지역 확대(68곳 ▶168곳), 도시재생리츠 융자조건 완화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70곳 선정·지원, 7개군 LPG배관망 공급
스마트영농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2개 조성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청년친화형 산단 확대(6개 ▶13개), 스마트공장지원 대상(2100개) 및 금액 확대
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220곳)노숙인(11곳) 한부모(59곳) 복지시설 화재예방시설 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주민보호구간(30개), 전통시장 노후전선(57곳), 횡단보도조명(신설257개, 보강395개)
미세먼지 대응	도시바람길 숲 7개 및 미세먼지 차단 숲(60ha)조성, 전기차 충전기 1070기(급속) 및 수소차충전소 20개 설치
신재생 에너지	농가협동조합태양광설치 금융지원(178kw), 411개 공공기관 유휴부지활용 태양광보급(15kw)

출처 :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그림은 한국경제 8.8일자 기사 참조)

-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자체의 생활형 SOC 건설 및 운영에 적용하고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의 계획과 조성단계에서 생활형 SOC 사업 명목으로 국비를 지원
- 또한 운영단계에서 주민밀착형 SOC시설운영을 이유로 지방비와 국비 투입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과거 U-City 사업이 침체된 원인은 공공(LH 등) 및 민간사업자가 기술 중심의 사업계획수립과 U-기반시설의 조성에만 치중한 결과,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됨
 - U-City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계획-조성-운영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하며 지자체 또는 사업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생활형 SOC를 패키지화해서 스마트시티 시설로 조성해야 할 것임
-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이전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생활형 SOC가 여전히 부족한 전국 혁신도시에 '생활형 SOC 스마트시티 패키지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적합함

[참고문헌]

1. 4차산업혁명위원회(2018),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3. 국토교통부(2017),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4. 국토교통부 외(2018),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전력 프로젝트 실증도시 선정 공모안내서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
 6. 전북연구원(2018), 혁신성장·미래비전 2050 세미나 발표자료(지능형 전북시티)
 7. 한국경제(2018),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8. 한국농업경제연구원(2017),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9.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시민주도 스마트시티의 도전과제
 10.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유럽형 지역경제 활성화 ICT 프로젝트 스마트빌리지
-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